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 | | | |
|-----------------------------|--------------------------------|--------------------------------------|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도시들의 노력 | 사회·복지 | 봉쇄령 전국으로 확대하고, 여름까지 성인 대상 백신접종 완료 추진 |
| 문화·관광 | 시민 문화공간 부활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코로나19로 줄어든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활성화 지원 |
| 산업·경제 | 올해 두 번째로 5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버려진 땅을 덧밭으로 가꾸는 도시정원 프로젝트 시행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이수진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이정근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박효택		홍남명
샌디에이고	김민희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도쿄	이선인	하노버	이희재
시카고	강기향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올랜도	박혜진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하와이	임지연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휴斯顿	이경선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에드먼턴	장지훈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토론토	고한나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도시들의 노력

캐나다 / 도시계획·주택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캐나다의 일부 대도시가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경험한 가운데 서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빙집세를 시행하여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급 부족 해소 효과를 거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연방정부 및 동부 대도시들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

배경

- 2020년 캐나다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1% 상승
 - 주요 대도시 중에서는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가 19.69%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몬트리올(15.24%), 토론토(10.27%), 밴쿠버(7.06%) 등이 그 뒤를 이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의 다국적 투자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글로벌 부동산 베를 지수에 의하면, 독일 뮌헨과 같이 거품 위험이 가장 높은 도시 그룹에 토론토가 속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
-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지적
 - 캐나다 국립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주택 구매자가 밴쿠버 부동산시장 전체 주택 물량의 33%, 토론토에서는 14%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거래 규모로는 밴쿠버에서는 전체 거래금액 290억 달러 중 96억 달러를 차지했으며, 토론토에서는 470억 달러 중 67억 달러를 차지
 - 밴쿠버市를 포함한 광역 밴쿠버 도시권 주민의 30%가 중국계로 추산
 - 중국 본토의 자산가들이 다량의 주택 구입 후 3분의 1 정도 공실로 방치하였지만, 주민세·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집값 급등
 - 경제성장을 위한 이민 확대를 주택 구매수요 증가와 부동산 시세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유학생 수도 2009년 10만 명에서 2019년 70만 명으로 늘어 잠재적인 주택 수요가 많음
 - 2020년부터 지속된 0.25%의 초저금리도 집값 급등에 영향을 미침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중과세 및 ‘투기 및 빈집세’(Speculation & Vacancy Tax) 시행으로 단기적인 집값 잡기에 성공
 - 캐나다 전국 최초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재 밴쿠버市가 2016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게 특별 취득세 15%를 부과
 - 전국적으로 내국인의 취득세율은 평균 1.5% 정도로 낮은 수준
 - 주정부는 밴쿠버市가 이미 시행 중인 ‘빈집세’를 적극 도입하여 2018년 취득세 중과세와 함께 통합 시행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20%로 상향
 - 중과세는 주요 투기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외국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타 주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도 적용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과세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
 - 외국인 및 그 가족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거주자
 - 주거 밀집 지역인 밴쿠버는 취득세 중과세 부과 지역으로 지정되어 2018년에 주택 가격은 7% 정도 하락하고, 거래금액도 2016년 180만 달러에서 2019년 150만 달러까지 하락
 - 2016년 대비 2019년 평균 주택가격은 16.7% 하락
- 투기과열지역인 밴쿠버市는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비워 두는 비거주자 주택에는 ‘빈집세’(Vacancy Tax/Empty Home Tax)를 부과
 - 2016~2017년에 건설된 신규 콘도(한국의 아파트와 유사)는 비거주자 점유율이 15.3%
 - 1만 8,000가구가 공실로 방치
 - 2017년부터 시행된 빈집세는 최초 1%로 시작하여 현재 1.25%로 상향
 - 6개월 미만 실거주자 혹은 임대인이 과세 대상
 - 빈집세가 시행된 지 2년 만인 2019년까지 2,538가구의 빈집이 1,893가구까지 감소하여 25% 개선
 - 빈집세 미신고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 부과
 - 세금 연체자에게는 세금의 5%를 추가 벌금으로 부과
 - 고의 부실신고 건에 대해서는 하루당 10,000달러의 추가 벌금 부과
- 온타리오주도 2017년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게 15%의 취득세 중과세 시행
 - 온타리오주에 속한 토론토市는 밴쿠버市의 사례를 바탕으로 빈집세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40%가 빈집세로 인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응답

- 캐나다 정부는 집값이 계속 치솟자 대출받은 주민이 실제 적용받은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은행이 평가하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
- 또한 정부는 2021년 1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선언

정책 평가

- 이와 같은 정책은 상당한 집값 하락 효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징수한 세금을 신규 서민 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 조치가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의 저해라는 논란도 일부 존재

<https://www.ubs.com/global/en/wealth-management/chief-investment-office/life-goals/real-estate/2020/global-real-estate-bubble-index.html>

<https://nbf.bluematrix.com/sellside>EmailDocViewer?encrypt=5ef50212-0fd5-41cb-9e7c-94ee145e6208&mime=pdf&co=nbf&id=peter.routledge@nbc.ca&source=mail>

<https://vancouver.ca/home-property-development/empty-homes-tax.aspx>

<https://www.fin.gov.on.ca/en/bulletins/nrst/>

<https://iitools-ioutils.fcac-acfc.gc.ca/MQ-HQ/MQ-EAPH-eng.aspx>

시민 문화공간 부활을 위한 캠페인 전개

이탈리아 피렌체市 / 문화·관광

피렌체市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민들의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유서 깊은 문화공간인 치르콜로(Circolo)¹⁾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캠페인 전개

배경 및 목적

- 치르콜로(Circolo)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 피렌체에 있는 치르콜로의 활동이 가장 활발
 - 치르콜로는 동그라미라는 뜻으로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형상을 상징
 - 나이, 성별, 국적, 인종을 초월하여 피렌체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연대와 결속을 위한 공간
 - 1957년 처음 설립된 문화공간으로 피렌체市에 250개가 존재하며 약 4만 5천 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활동
 - 이탈리아 전역에 5,000개의 치르콜로가 존재하며, 피렌체에 있는 치르콜로의 활동이 가장 활발
 - 영화상영, 정치토론, 미식체험, 봉사활동 등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수행
 - 市의 지원을 받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치르콜로 운영난 발생
 -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금지, 이동제한, 모임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 중지
 - 이에 따라 공간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함
 - 이에 피렌체市는 시민들의 문화적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르콜로 부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

1) 동그라미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서클(circle)로 번역

주요 내용

- 치르콜로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진행
 - 200명 이상의 치르콜로 직원들이 실직 상태가 되고 공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자 市는 시민들에게 기부를 장려
 -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원하는 만큼 기부 가능
 - 50일 동안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며, 처음 4일간 약 14,000유로가 모금되는 등 고무적인 반응을 보임
 -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메시지 전달 코너를 추가하여 피드백을 주고받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함
- 시민들과 함께 치르콜로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개최
 - 피렌체의 주요 광장에서 설명회, 비디오 상영 등을 추진하여 치르콜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림
-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
 -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피렌체의 대표적인 치르콜로 상황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과 해결책을 모색
 -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

정책 평가 및 의의

- 시민들이 市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약 60%가 치르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람들과의 연대와 문화적 경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을 증명
 - 시민들에게 치르콜로는 단순한 문화공간을 넘어 문화유산이자 삶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가짐



[사진] 피렌체市와 함께 치르콜로 부활 캠페인을 진행하는 시민들

(출처: arcifirenze.it)

<https://www.arcifirenze.it/news/salva-circoli-fai-la-tua-parte/>

<https://www.produzionidalbasso.com/project/salva-i-circoli-fai-la-tua-parte/>

<https://www.lungarnofirenze.it/2021/03/salva-i-circoli-fai-la-tua-parte/>

김 예 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올해 두 번째로 5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말레이시아 / 산업·경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두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해 200억 링깃(약 5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Pemerkasa)을 발표. 이번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경제 회복,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및 커뮤니티 지원 등임

배경 및 목적

- 2020년에 발표된 네 번의 경기부양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6일, 6월 9일, 9월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하는 약 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
 - 3월 27일 발표한 1차 경기부양책(Prihatin)¹⁾은 2,500억 링깃(약 67조 5천억 원) 규모로 국민복지, 중소기업 등 기업 지원, 국가경제 강화가 주요 골자임
 - 4월 6일 발표한 2차 경기부양책(Prihatin SMEs)은 100억 링깃(약 2조 7천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함
 - 6월 9일 발표한 3차 경기부양책(Penjana)은 350억 링깃(약 9조 4천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
 - 9월 23일 발표한 4차 경기부양책(Kita Prihatin)은 100억 링깃(약 2조 7천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함
- 2021년에 발표된 2번의 경기부양책
 - 2021년 1월부터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심화되자 1월 18일 150억 링깃(약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Permai)을 발표
 - 1월 18일 발표한 5차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 극복, 국민 복지 및 내수 활성화가 주요 골자
 - 3월 17일 200억 링깃(약 5조 4천억 원) 규모의 6차 경기부양책(Pemerkasa) 발표
 - 6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경제회복,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및 커뮤니티 지원 등임. 이를 위해 20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1) 시간상으로 보면 1차 경기부양책은 2월 27일 모하맛 마하티르 전 총리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1차가 되지만, 3월 27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1차 경기부양책 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를 1차 경기부양책으로 봄

6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 억제
 - 3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 집단면역 지원 확대
 - 이동제한령(MCO) 시행 영구히 중단
 - 표준운영절차(SOP) 위반 등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벌²⁾
- 경제회복
 - 6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홍수 피해, 도로 공사 등 소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금 증액
 -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업체를 위한 지원책(GKP3.0) 확대 시행
 - 소액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 마련
 -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관광 및 소매산업 진흥책 마련
 - 기업 회생 지원 및 역량 강화
- 국가경쟁력 강화
 - 5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투자 조성 등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
 - 자동화 및 디지털화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투자 및 수출 시장 확대
 -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역 및 커뮤니티 지원
 - 6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소득감소자 대상 현금 추가 지원
 - 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 여성기업 지원
 - 장애인 대상 현금 지원
 - 청소년 대상 현금 지원
 - 소득감소자 대상 보조금 지급

2)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방문객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표준운영절차(SOP)를 시행 중.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만 링깃의 벌금을 부과

<https://www.pmo.gov.my/2021/03/teks-ucapan-program-strategik-memperkasa-rakyat-dan-ekonomi-pemerkas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malaysia-pm-muhyiddin-rm20-billion-economic-stimulus-covid-19-14428000>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봉쇄령 전국으로 확대하고, 여름까지 성인 대상 백신접종 완료 추진

프랑스 / 사회·복지

2020년 11월 프랑스 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몇 달째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2만~3만 명에 육박하고,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불안정세가 지속. 2월 추가대책 시행에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파리 근교 등 북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이동거리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 아울러 정부는 빠른 백신접종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판단하고, 성인은 올해 여름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배경

- 2020년 11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프랑스 정부는 전국 봉쇄령을 내려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럼에도 몇 달째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2만~3만 명에 육박
 - 이에 더해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프랑스 내에서 발견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프랑스 정부는 올해 2월 이동제한(봉쇄령), 재택근무 권장, 진단검사, 야간 통금, 백신접종 등을 골자로 한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부처별로 발표
 - 그럼에도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더욱 증가 추세를 보임

주요 내용

- 3월부터 실시 중이던 수도권 및 북동부 지방 대상 방역대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식료품점 등 필수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 금지
 - 10km 거리 이상 이동 금지. 단, 외출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은 두지 않음
 - 학교 3주간 폐쇄(방학기간 포함)
- 재택근무가 가능한 모든 직종과 기업은 이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

-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고용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에 노동부 장관은 재택근무 실시를 강력히 권고
 - 2020년 말 이후 재택근무가 혼자히 줄어듦
 - 정부는 전체 업종 가운데 약 1/3이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노동부 장관은 각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권고. 첫째는 재택근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줄일 것, 둘째는 주 1일, 2일, 3일 등 부분적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재택근무를 늘릴 것
 - 이 역시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지키는 업체는 소수에 그치는 실정
- 정부는 백신접종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로 판단해 백신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
 -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백신접종을 추진해 성인은 올해 여름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대책 강화 및 완화의 반복 속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약해짐과 동시에 피로감이 쌓임
 -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프랑스 젊은 층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점점 더 무시하는 추세. 예를 들어 주점이 문을 닫으면 거리나 광장 등에 모여 통금 시간을 무시하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남. 따라서 젊은 층의 감염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계획
 - 2021년 4월 초 기준 프랑스 국민 약 1,137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 이 중 35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
 -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
 - 1월 18일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 3월 27일부터 만 70~74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 4월 12일부터 만 55~69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AZ, 얀센)
 - 5월 15일부터 만 50~54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미정)
 - 6월 중순부터 만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미정, AZ는 제외)
-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4월 말경 개학과 동시에 타액(침) 시료를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2076-conference-de-presse-sur-les-mesures-de-lutte-contre-la-covid-19>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video-coronavirus-suivez-en-direct-la-conference-de-presse-de-jean-castex-et-olivier-veran-1612433757>

<https://www rtl fr/actu/bien-etre/en-direct-coronavirus-suivez-la-conference-de-presse-du-gouvernement-7900000193>

<https://www lci fr/sante/en-direct-coronavirus-covid-19-pandemie-conference-de-presse-de-jean-castex-jeudi-le-dispositif-covax-distribuera-ses-vaccins-dans-18-pays-pauvres-des-fin-fevrier-2175367.html>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코로나19로 줄어든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캐나다 / 사회·복지

캐나다는 전체 인구수 대비 봉사활동 시간이 매년 세계 3~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원 수요 급증과 심각한 기부 감소, 봉사활동 관련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방정부, 州정부 등 각급 정부의 재정 지원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자선 단체의 방역 준수를 전제로 한 운영방식 변경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

배경

- 2018년 기준 캐나다인의 74%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총 34억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1년 풀타임 근로자 180만 명의 근로시간에 해당
 - 캐나다의 인구수 대비 봉사활동 시간은 세계 3~4위 수준을 매년 유지하고 있음¹⁾
 -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인구규모에도 불구하고 약 2,540만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2018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부는 감소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증가
 - 자선단체의 31%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적은 유급 직원을 보유한 반면 근무 시간은 증가
 -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면 자선단체의 60%가 자원봉사자 수가 감소하고 자원봉사 시간도 58% 감소
 - 자선단체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평균 43% 수의 감소
 - 대표적인 기부단체인 푸드뱅크 캐나다(Food Banks Canada)²⁾에 따르면, 코로나 19 유행 이전보다 84만 명 이상 많은 인원이 매월 지원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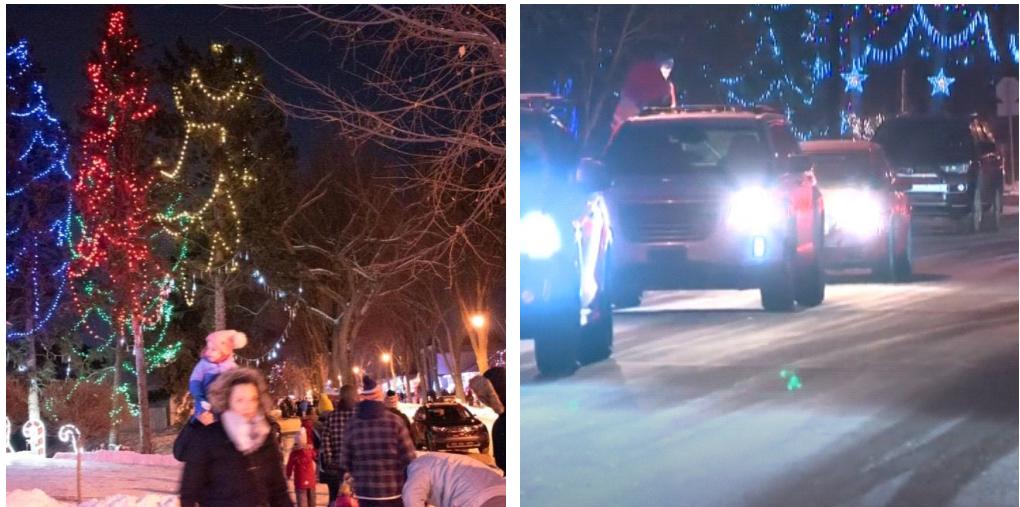
주요 내용

- 자선단체는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
 - 식료품 기부는 각 州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소그룹 활동과 비대면, 가구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전환

1)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most-charitable-countries>

2)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기부받아 식료품 부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로 1981년부터 운영 중

- 식료품 기부단체인 푸드 뱅크 캐나다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단체가 신청을 하고, 신청한 이들이 푸드 뱅크를 방문하여 식료품을 받아 가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했음
-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료품 기부 접수를 위하여 드라이브스루 접수장을 개설하여 접촉을 최소화함
- 기부받은 식료품은 기존 식품 배달 전문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
- 매년 12월 초부터 그다음 해 1월 초까지 열리는 자선행사인 캔디 케인 레인(Candy Cane Lane) 행사는 2020년에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열림
 -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선행사에서는 거리를 밟히는 각종 조명 행사를 열어 볼거리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썰매 타기, 화덕 및 푸드 트럭이 등장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모두 취소
 - 보행로는 방역지침에 따라 폐쇄되어 참가자들은 지정된 차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됨



[사진] 2019년에 열린 캔디 케인 레인 행사(좌)와 2020년에 열린 행사(우) 장면

(출처: <https://globalnews.ca/video/7517945/2020-candy-cane-lane-opens-as-drive-thru-only>)

- 방역 취약 대상인 노숙자의 숙식공간 마련 및 지원 방식 변화
 - 앨버타주에 있는 에드먼턴市는 市 소유 전시 박람회장을 대규모 노숙자 숙식공간으로 제공

- 또한 에드먼턴市의 대표적인 노숙자 밀집지역에서 활동 중인 자선단체 '보일 스트리트'는 음식배급 서비스를 단체배급 방식에서 개별 도시락 제공 방식으로 변경
- 개인 기부를 통해 노숙자에게 표준화된 식사 서비스를 제공



[사진] 보일 스트리트 커뮤니티 서비스의 식사 제공 모습

(출처: <https://www.boylestreet.org/community-centre>)

- 각급 정부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금 및 플랫폼 지원 확대
 - 자선단체의 42%는 캐나다 비상 임금 보조금, 캐나다 비상 상업용 건물 임대 지원, 캐나다 비상 비즈니스 지원 제도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음
 - 유급 직원이 있는 자선단체의 53%가 임금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유급 직원의 54.8%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임금 및 시설 보조금 지원을 확대
 - 2021년 3월부터 앨버타주 민간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동 재원으로 조성되는 핵심 인력 보조금(Critical Worker Benefit) 수혜 대상에 포함됨
 - 앨버타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4억 6천5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대상자에게 1,200달러를 지원
 - 연방정부는 푸드뱅크 캐나다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지원 확대
 -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 및 재능기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지원

- VolunteerConnector.ca나 VolunteerConnector.org를 통해 자원봉사 기회 탐색 가능
- 소규모 자원봉사를 위해 지역 자선단체를 살펴보고 필요한 품목, 기부 활동 또는 기금 모금활동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 온타리오 주정부와 스파크(SPARK)라는 비영리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선단체가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확대 개편
 - 주 전역의 자선단체는 음식과 약품 배달, 노인을 위한 심부름, 건강검진, 자가격리자를 돋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
 - 온라인을 통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무료 과외 교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모집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
- 학생의 봉사활동 기회와 직업 체험, 재정 지원을 위한 학생 서비스 보조금 제도(Canada Student Service Grant program) 시행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보조해 주는 지원책 시행
 - 캐나다 전역의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와 환경, 민주주의 구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
 - 특정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경험 및 경력을 쌓고 동시에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 활동시간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뉘며, 보조금은 1천 달러에서 5천 달러까지 지급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재학생 또는 2019년 12월 이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함
 - 활동기관은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여야 함

정책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급 직원의 임금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확대 등 각급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자선단체들이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대면 지원 위주인 자선단체의 특성상 시설이나 재정 측면에서 열악한 자선단체는 수개월 내 도태될 것이라고 사회복지 전문 연구기관인 이매진 캐나다(Imagine Canada)가 비관적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보조금 지원이나 온라인 재능기부 등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https://www.ctvnews.ca/canada/most-challenging-difficult-year-canadian-food-banks-get-creative-to-meet-demand-amid-pandemic-1.5141549>
<https://www.volunteerconnector.org/>
<https://www150.statcan.gc.ca/n1/pub/45-28-0001/2020001/article/00037-eng.htm>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ducation/student-aid/grants-loans/full-time.html>
<https://news.ontario.ca/en/release/56626/ontario-creates-partnership-with-volunteer-hub-to-help-seniors>

버려진 땅을 텃밭으로 가꾸는 도시정원 프로젝트 시행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¹⁾ / 환경·안전

쿠알라룸푸르市는 2020년 10월부터 버려진 땅을 텃밭으로 재정비하는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시행. 市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농작물의 자급자족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으로 삶의 활력을 제공할 방침

배경 및 목적

- 버려진 땅이 그대로 방치됨에 따라 이를 텃밭으로 재정비하는 도시정원 프로젝트 (Projek Kebun Bandar) 시행
 - 쿠알라룸푸르市는 도시 주택 프로젝트(PPR)와 연계해 버려진 땅을 텃밭으로 재정비하는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

도시정원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도시정원 프로젝트는 50여 개의 도시 주택 프로젝트 참여 시민들이 관개배수 부서 (JPS) 소유의 버려진 땅을 텃밭으로 재정비하는 역할을 수행
 - 이 프로젝트는 관개배수 부서가 승인하고 市 커뮤니티개발 부서와 도시건강 부서가 모니터링 및 관리 수행
 -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버려진 땅의 쓰레기와 잡초 등을 제거한 뒤 바나나, 파인애플, 옥수수, 감자, 시금치, 고추 등 30여 종의 채소와 과실수 등을 재배
- 성인, 어린이 등이 참여해 농작물의 자급자족과 경작을 체험하고, 도시의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
 - 현재 쿠알라룸푸르 내에서 21개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시행
-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도시정원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과실수와 채소를 재배한 뒤 판매 경로를 모색
 - 텃밭에서 키운 농작물을 자급자족하거나 판매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가정경제에도 기여

1) 쿠알라룸푸르의 공식 명칭은 쿠알라룸푸르 연방 직할구로 말레이시아의 수도이자 243km² 면적의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 말레이시아는 州 13개와 연방 직할구 3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리자야가 연방 직할구로 분류

- 텃밭 가꾸기를 통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돋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진] 도시정원 프로젝트 시행 전(좌)과 후(우)의 모습

<https://www.malaymail.com/news/life/2021/02/05/dbkl-ppr-residents-turn-abandoned-reserve-land-into-vegetable-garden/1947258>

<https://www.hmetro.com.my/mutakhir/2021/02/674437/nikmati-hasil-bila-berbudi-kepada-tanah-metrotv>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01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4월 12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견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